

0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한·중 지방 연계협력 강화 방안:
지방정부 대외교류체계 검토를 중심으로』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한·중 지방 연계협력 강화 방안: (지방정부 대외교류체계 검토를 중심으로)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1. 들어가며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과 상호연동성이 급속히 심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의 사회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역시 이 같은 상황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 군사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왔다. 그러나 한중간 정치·사회적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양국은 수교 이후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다.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중앙정부간 협력과 더불어 민관산학 각계의 협력과 노력, 특히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며, 양국 지방교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아시아 역설 상황에서 한중 지방정부 역할과 교류의 중요성 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2. 동아시아 역설과 한중 지방정부 교류의 중요성

1) 동아시아 역설(paradox)의 심화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문화자산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정치경제적 상호연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이래 서로간의 역사 해석 및 영토 문제 등을 포함하여 각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갈등과 충돌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가 참여한 국제관계 게임의 장으로 부상하면서 크고 작은 정치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민족·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역내국가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각국의 거시적 국제관계 정책 및 핵심이익과 관련된 공식적인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국 정부는 민족·국가주의에 뿌리를 둔 이러한 성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2) 한중 지방정부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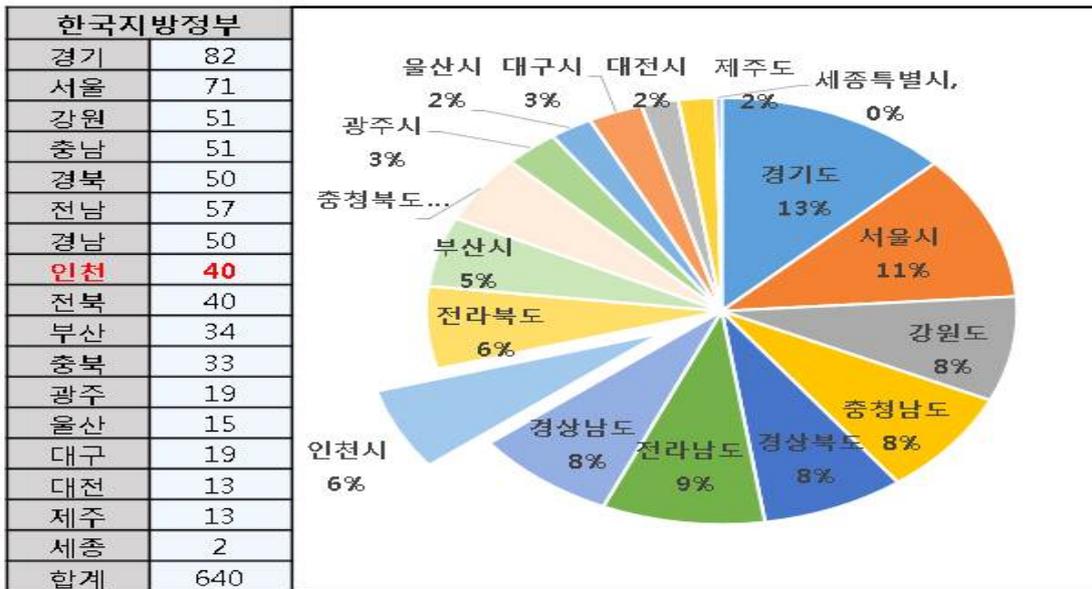
1) 이 글은 공주대-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 글에서는 장호준·김수한(2016)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일부 추출·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갈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기획력, 업무추진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한중 양국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기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²⁾

또한, 지방정부간 교류는 한중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상층(중앙정부) 교류와 기층(국민) 교류를 매개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량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채널을 다층화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형, 체감형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지방정부가 구축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축적된 교류 경험은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2017년 11월 기준 한국의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가 중국의 지방정부와 640건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의 결연관계를 체결한 상태이다.³⁾ 이는 한국 지자체가 일본 지방정부와 체결한 195건의 자매우호도시 결연은 물론, 미국의 지방정부와 체결한 154건의 결연 체결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양국 지방정부 자매우호결연관계는 각종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지방정부 - 중국 자매우호 결연 비중 (2017.11)



자료: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정리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8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309개의 지방도시는 전세계 133개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도시와 2181건에 달하는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의 지방정부와의 우호도시관계(한국의 자매교류에 해당) 체결 건수는 157건으로 일본(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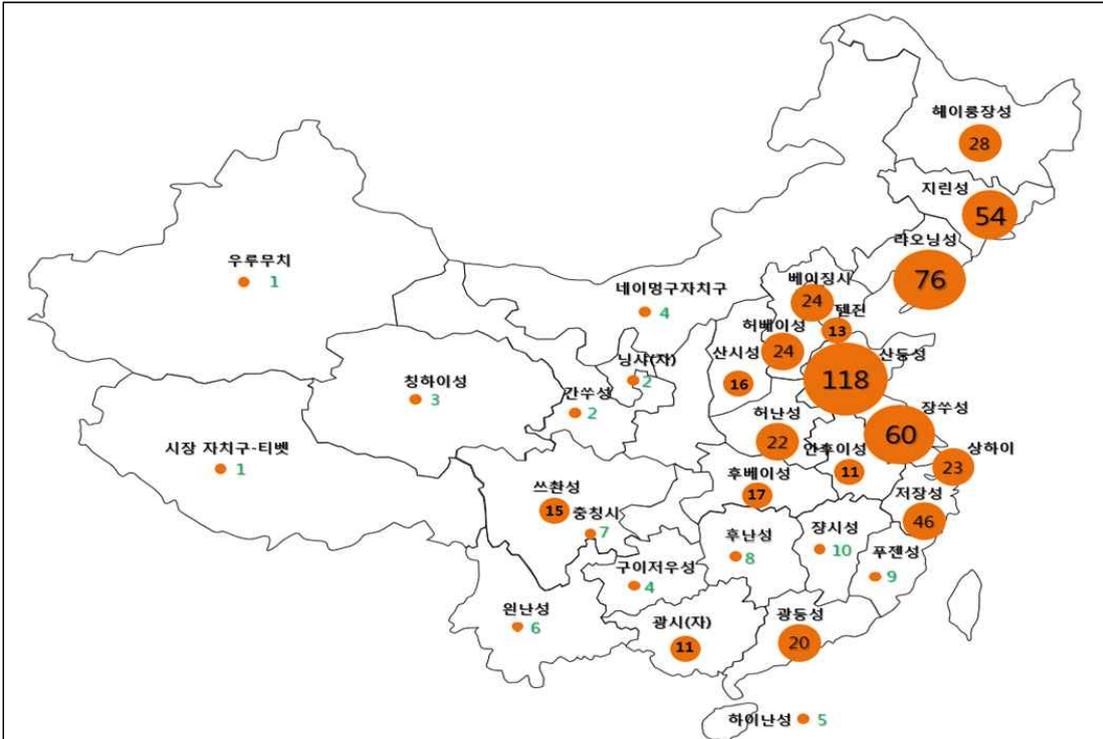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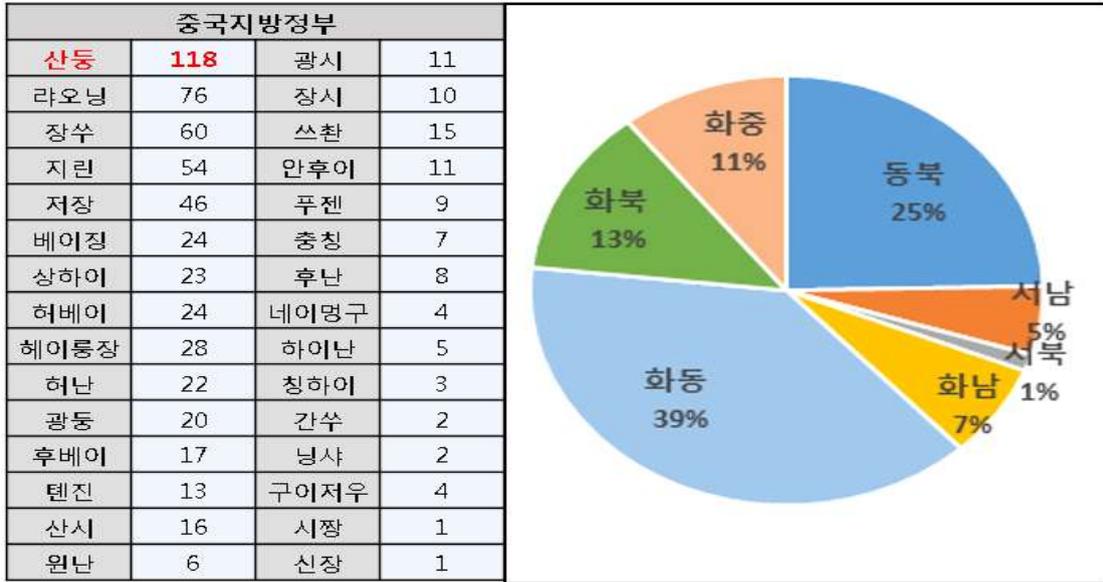
2) 전지구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에서 갖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내용은 신중호 외(2012: 265) 참고.

3) 한중지방정부 자매우호 결연 현황은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DB활용하였다. .

(<http://www.gaok.or.kr/gaok/exchange/listNation.do?menuNo=200082>:검색일 2017-11-18)

과 미국(243)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2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중 수교의 역사를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가 상호교류에 매우 적극적임을 방증한다. 기존에 체결된 지방도시간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사업의 고리로 활용하여 한중관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한국지방정부 - 중국 자매우호 결연 지역 분포 (2017.11)



자료: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정리

3. 한국 지방정부 국제사무 구조 및 특징

많은 한국의 지방정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점차 교류지역이 확대되고 그 주체와 영역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한중FTA 등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고자 중국과의 비즈니스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경제통상형 국제교류 조직체계

이 같은 경향은 한국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체계와 같은 제도 및 공식 업무에 반영되어 있다. 우선 <표1>과 같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중국교류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70%이상의 12개 시·도 정부가 중국교류 주무 부서를 경제계열에 두는 경제·통상형 국제교류 조직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별·광역시 중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은 국제도시네트워크 수립·관리 및 내향적(inbound) 국제화에 주안점을 두는 도시외교형 국제교류 조직체계를 두고 있지만, 서울 등은 경제 부서에 별도의 중국담당자를 두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국 등의 관광부서에 중국팀 또는 담당자를 두는 광역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 직접적이고 단기적 경제 효과 중시 국제교류 경향

<표2>와 같이 17개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중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 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지방정부와의 자매우호결연을 포함한 도시네트워크 관리, 의전 및 통·번역 등의 중국교류 일반 업무 외에 통상·투자유치, 관광진흥·홍보마케팅, 중국 현지 정책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조직 및 업무 분장은 공식적 제도로서 관련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경제효과 및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국제교류 정책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표 1> 한국 광역 지방정부 중국교류 주관 부서 조직 현황

	실/국	담당관/과		팀(중국전담인원)
특별·광역시				
서울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중국팀(4)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1)
부산	산업통상국	통상진흥과		아시아통상팀(1)
	문화관광국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3)
대구	-	국제협력관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팀(1)
인천	-	중국협력담당관		중국교류기획팀(5) 중국정책개발팀(3) 중국투자유치팀(3)
대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중국담당(2)
광주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중국담당(2)
	문화관광정책실	관광진흥과		중국담당(2)
울산	창조경제본부	통상교류과		국제교류담당(1)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1)
세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제협력(2)
도·특별자치도			
경기	경제실	국제협력관	투자진흥과
			외교정책과
강원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중화권팀(1)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해외마케팅팀(1)
충북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3)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관광정책팀(2)
충남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	중화권팀(4)
전북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
전남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	중국협력담당(6)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2)
경북	일자리민생본부	글로벌통상협력과	국제통상담당(3)
경남	미래산업본부	국제통상과	중국담당팀(4)
제주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중국협력팀(4)

자료 :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

<표 2> 한국 광역 지방정부 중국교류 업무 개요

지자체	중국관련 부서 주요 업무
광역시	서울 ○ 중국지역 자매우호도시(타이베이 포함) 교류협력 ○ 중국지역 주요 거점(신규)도시 및 제도시 교류 ○ 전략적 중국교류협력 방안 마련 및 시책사업 발굴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운영, 베세토, 중국 추진업무 ○ 시 대표단 해외순방 및 외빈방문 지원 ○ 중국외빈 시장단 접견 및 행사관련 통·번역 업무 ○ 서울클럽 등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중국의 날 등 중국관련 행사 추진 ○ 중국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관련 프로젝트 진행 ○ 중국지역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아이템 발굴 ○ 중국지역 라운드테이블, 투자유치관련 통계(MOU)관리
	부산 ○ 중화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상담회 등) ○ 국제도시간 경제협력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중화권) ○ 대 중국 경제교류협력 관련 업무 ○ FTA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경제통상국, 일자리산업실 (경제관련업무)소관 통번역 (중화권) ○ 중국어권 정책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해당지역 자매, 우호도시 연락업무
	인천 ○ 중국지역 투자유치 및 한중FTA 기업지원 ○ 민간 중국교류사업 지원 및 중국교류 시책사업 발굴 ○ 중국 주요거점도시 자매우호결연 및 인적교류 관리 ○ 대중국 화교권, 영어권 등 투자유치 추진 ○ 투자관련 브로셔 중국어 번역 및 제작지원 ○ 중국 화교권 IR 지원
	광주 ○ 중국, 홍콩, 몽골, 동남아시아권 국제교류 사업 ○ 중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지역관광마케팅 ○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 ○ 중국유학생프렌들리 행사
광역도	경기 ○ 중국 국제교류 추진 ○ 중국 교류지원 ○ 중국자본투자유치
	강원 ○ 중화권 외국인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 추진 ○ 중화권 시장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캠퍼어, 설명회, 박람회 참가, 세일즈 콜, 간담회 - 현지 시장 관광동향 파악·분석·관리 - 중화권 시장 대상 관광상품 개발·육성 - 중국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 상하이·베이징·선양 강원관광홍보센터 운영 및 지도
	충북 ○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운영·관리 ○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 운영
	충남 ○ 중국 동북3성과의 교류업무 추진 ○ 중화권 통상관련 업무 지원 ○ 중화권과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중화권 교류일지 및 교류통계 작성 ○ 중화권 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 중화권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추진 지원 ○ 중화권 교류관련 각종 업무보고
	전남 ○ 중국 통상 및 교류협력 추진 ○ 중국 진출 도내기업 지원 ○ 대중국 정책과제 발굴 및 협력채널 운영 ○ 중국 동반성장·협력전략 수립 추진 ○ 중국 해외자매결연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국 신규사업 발굴 및 교류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중국 지방정부 경제·문화 협력 및 민간과의 교류협력 증대 ○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중국 시정 조사·연구 ○ 중국관광객유치 마케팅업무
	경북 ○ 중화권 교류사업 추진, 중국국제교류원 관리 ○ 중국교류지원, 통역
	경남 ○ 중국 동반성장·협력전략 수립 추진 ○ 대중국 신규 사업 발굴 및 교류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중국 및 아세안지역 진출 도내기업 지원 ○ 중국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관리
	제주 ○ 대중국 정책과제 발굴 ○ 대중국 협력채널 운영 ○ 부동산투자이민제도관리 ○ 중국 자본현황 관리

자료 :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4. 중국 지방정부 국제사무 구조 및 특징

1) 외사관공실 구조 및 사업 경향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외사관공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집권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대외교류에 있어서도 중앙의 통일관리와 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같은 자율성 및 주권을 지닐 수 없다.⁴⁾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의 지방 국제교류는 중앙 당정의 외교지침 견지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현지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사회문화 교류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문화교류가 중국 지방 대외협력의 중요 사업 유형이자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교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국제교류의 핵심 사업과 가치로서의 사회교류와 각종 인적, 문화적 교류사업이 외사관공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요 외교방침인 공공외교가 지방 국제교류의 중요한 사업이자 방향으로서 관찰되고 있다.⁵⁾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외사관공실 조직구성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지역 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외사관공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대외일반사무업무부서: 종합행정부서, 해외안전, 출입국관리 등 ②국제지역사업처: 대륙별 교류사업, 홍콩·마카오, 접경지대 대외사업부서 ③대내외 민간교류 부서: 국제교류처, 대외인민우호교류협회. 국제지역사업 부서는 대개 대륙별로 나누어 아시아태평양, 유럽·미국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과의 교류업무는 아시아태평양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표 3> 중국 성급 지방정부 외사관공실 조직구성

	비서처	종합행정처	인사처	의전처	정책법규처	영사처	해외관리·안전처	출국관리처	신문문화처	교민처	국제교류처	여권·비자사무처	비정부조직처	경제과학처	변경/주변국사업처	홍콩/마카오사무처	지역처	대외인민우호협회
베이징	○		○	○	○	○	○	○	○			○			○	○		
상하이	○	○	○	○	○	○	○	○	○			○			○	○	○	○
톈진		○					○	○							○	○	○	
충칭	○	○	○	○	○	○	○	○	○				○		○	○	○	○
하이퉁장	○		○			○	○			○				○			○	○
지린	○	○	○				○			○		○			○	○	○	○
랴오닝	○	○	○	○		○	○	○	○	○						○	○	
산둥	○	○	○	○			○	○								○	○	○

4) 중국의 지방 국제교류는 성(省), 시(市), 구(區) 및 현(縣)급 정부의 외사관공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외사관공실은 동급 지방정부의 구성 부분으로서 지역 대외업무의 종합관리 부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무원 외사관공실의 지도를 받으며 각 급 정부에 설치되었던 지방 외사관공실은 문화대혁명 기간 폐쇄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성급의 지방외사관공실이 점차 부활했으며 이후 지방 국제교류 수요 증가에 따라 현급 및 학교, 기업 등에도 외사업무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 지방외사관공실 연혁 및 역할에 대해서는 李惠娟(2014, pp. 16-17) 참고.

5)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 대외교류 방침에 대해서는 산둥성 모지급시 외사관공실 간부 인터뷰.

허베이	○	○	○		○			○		○					○	○	○
허난		○	○	○			○	○		○	○			○		○	○
산시		○	○	○			○	○	○	○	○				○		○
장쑤	○	○	○	○		○		○	○			○			○	○	○
안후이	○	○	○	○		○		○		○				○			○
후베이	○		○			○		○		○		○			○	○	○
후난	○		○	○			○	○	○	○	○				○		○
산시	○		○	○		○	○	○	○	○				○		○	○
장시	○		○	○		○		○	○	○	○				○		○
저장	○	○		○		○		○	○	○				○		○	○
푸젠	○	○	○			○	○	○			○				○		○
광둥	○		○	○		○	○	○	○		○	○					○
쓰촨	○		○	○		○	○	○	○	○				○		○	○
간쑤		○		○				○	○	○	○					○	○
칭하이		○		○			○	○	○	○	○					○	○
구이저우		○	○	○		○		○	○	○						○	○
윈난	○		○	○	○	○	○		○		○	○			○		○
하이난	○	○	○			○	○	○	○	○	○						○
신장	○		○	○		○		○	○	○	○	○	○	○	○		○
티벳		○	○	○	○	○		○		○					○		○
네이멍구	○			○			○	○		○						○	○
닝샤		○					○	○	○	○							○
광시	○		○			○		○	○						○	○	○

자료 : 각 성시 외사관공실 홈페이지 내용 정리

2)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의 기능과 역할

중국 지방 국제교류 사업 영역 및 주체의 다양화 경향 속에서 지방 외사관공실의 중앙정부-지방 간, 지방정부 내부 그리고 공공-민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정부 외사관공실의 허브 역할 강화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 민간교류를 진행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지방 외사관공실의 관리 및 지원 속에서 각 지방정부의 상무국 및 관광국 등 실무부처의 대외교류 활동이 전개된다.⁶⁾ 또한 대외교류 경험이 부족하고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국 지방도시의 민간단체 및 기관의 경우 외사관공실의 대외협력 경험 및 연계망에 힘입어 보다 손쉽게 해외교류 대상을 선정하고 연계할 수 있다.⁷⁾

이 같은 중국 지방정부 외사관공실의 대외교류 허브 기능은 외사관공실과 명목상 민간외교 사회단체인 지역의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우협)가 합쳐져 있는 조직 구성(合署辦公)을 통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민간외교를 강조하여 왔다.⁸⁾

6) 대외교류에 적극적인 산둥성 웨이하이의 경우 한중FTA와 관련하여 한국 광역지자체와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정부의 외사관공실 및 산하 한국 사무소를 통한 연계를 추진하고, 이후 실무적인 협력단계에서는 상무국과 관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2015년 12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관계자 면담).
7) 해외자매우호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매년 국제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산둥성 지난시외사관공실의 경우 참석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하 지방정부 및 사회단체의 해외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였다.
8) 냉전시기 서방국가(혹은 소련) 등과의 국교단절 등 외부 여건을 극복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민간외교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왔다. 관련 내용은 李惠娟(2014:105) 참고.

중국 민간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전국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전국우협)는 1954년에 설립된 전국성 인민단체로서 실질적인 국가급 외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대부분의 지급시 이상의 지역에 275개 지방급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지방우협)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⁹⁾

지방우협의 경우 지역에서의 민간외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베이징시, 랴오닝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우협은 현지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과 통합운영 되고 있다.¹⁰⁾ 중국 각 지방우협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 각 도시들의 민간 국제교류 조직과 연계를 맺고, 교량 역할 및 유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② 민간 대외 경제, 무역 협력, 주요 인적 교류 주관 ③ 문화·체육·교육·과학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국제교류 추진 ④ 청소년 교류 및 각종 전시회 행사의 주관 관리 등이다. 일반적으로 외사판공실의 총책임자인 주임(主任)이 지방우협의 장을 겸임하며, 부주임 가운데 1인이 지역 우협의 운영 책임을 담당한다.¹¹⁾

지방우협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외 민간교류가 여전히 반관반민(半官半民)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서,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사판공실과 우협의 통합적 체계로 인해 지방 차원에서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5. 나오며: 종합 및 제언

■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아이템 및 채널 필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광역 지자체가 경제통상 또는 투자유치 부서 체계에 중국 교류 부서를 배치하여 두고 있으며, 관련 업무 내용 역시 경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교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에 대한 당과 중앙정부의 강조를 배경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국제교류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 목적과 지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실질적 협력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고안해야 한다. 국제교류에 있어 일방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아이템으로는 한중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 기층 <경제인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양국 지방정부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업으로 ① 한중청년창업인큐베이팅 기지 공동운영 ②국유기업

9) 지역 우협 수는 전국우협 홈페이지 참고. <http://goo.gl/ICMGwL> (검색일: 2015년 10월 25일)

10) 1981년 설립된 베이징시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는 중일수교 정상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과의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립적 조직 구성을 가진 경우이다. 이 같은 조직형식은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설립 초기 조건 및 지역 여건/필요성에 의한 것임. 현재 베이징우협의 회장은 베이징시 공산당위원회의 부서기인 뤼이원(吕懿文)가 겸직하고 있다. 베이징 우협의 직원은 시 공무원의 신분이며, 베이징우협은 시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베이징우협 관계자 인터뷰 2015년 8월 6일)

11) 산둥성 모지급시의 경우 외사판공실에 인민우호교류협회의 실질 사무 책임을 담당하는 1인의 처장을 두고 있으며, 비서장 1인 그리고 실무 부서원 1인이 배치되어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5년 8월 11일).

경영진연수 등을 예시(例示)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경제교류 내 실화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공동운영>

- 청년창업을 강화하고 있는 한중 양국 정부의 국정기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중청년창업인큐베이팅기지>를 공동으로 설립
- 양국 도시에서 선발된 청년들이 입주하여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에 범용(汎用)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함
- 정부 및 기업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

<텐진 국유기업경영진 인턴연수 (2014-2015년)>

인천 공공시설 및 산업체 탐방



- 컴팩스마트시티
 - 뉴티공동판매숍 '유티고'
 - U-CITY 통제센터
 - 송도생활쓰레기집하시설
 - 송도폐수처리장
 - 인천국제항만 등
- IFEZ 공공시설, 인천항 방문으로 도시운영 현장을 살펴봄

강좌



- 한국신흥산업발전정책 및 성공사례
 - 인천해양물류산업
 - 한국금융제도
 - 한국발전모델
 - 인천경제산업
 - 한류·브랜드육성전략
- 중국어 원어강의를 통해 한국 및 인천에 대한 교육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 소래포구
 - 율미도/율미전통공원
 - 신포시장 등
- 인천 시민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의 명소를 방문하고, 시민들과의 교류기회 제공

의료시설 시찰 및 의료검진 체험



- 인하대학병원
 - 길병원
 - 국제성모병원
- 지역내 대형병원을 방문, 한국의 첨단 의료 설비를 시찰하고, 의료검진 체험 제공

■ 국제교류 체계화를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정비 및 제도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전개하기 위해, 각국 국제교류 관련 중앙-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 속에서 對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를 강화하고 내실

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①한중 지방외교 권역별 허브조직 마련

1:1 형태의 한중 지방교류와 별개로, 한중 권역별 지방외교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한중교류에 있어 지방정부간 소모적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역별 공동 사업 구상을 통해 상호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그리고 상호보완적 경제산업 교류협력 증진이 가능하다. 例示) ‘한중환발해권지방정부포럼’, ‘해상실�크로드 한중지방정부포럼’, ‘황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 ‘환동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 등 또한 일본의 ERINA(환일본해연구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서해권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초광역지역종합연구소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우협 매칭 국제교류 전문기구 활용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관공실과 명목상의 민간(외교)단체인 우협이 합쳐져 있는 조직 구성에 상응하는 교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지방정부의 순환보직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담당자의 국제교류의 전문성과 경험축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지방정부의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국 우협에 상응하는 교류채널로서 한국 지방도시의 국제교류재단 등 전문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제도적 기반 마련

△권역별 허브조직△지방국제교류민간기구 등의 기구 수립 과정에 중앙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국제교류 중앙-지방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으로, 관련 법제(조례 포함) 및 종합계획의 수립, 국제교류기금을 포함한 재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한. 2013. 「한·중 교류의 새로운 방식: 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1권 4호.
- 신종호. 2014. 「중국의 대외정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09).
- 신종호. 2012. 『한중관계 2.0: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 장호준·김수한 2016. 「한·중 인문유대와 지방도시간 인문교류: 현황과 과제」, 『중국과 중국학』 제27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http://goo.gl/e8zYfo>
- 金正昆·唐妮娜. 2009. 「当代中國外交的新路徑: ‘人文外交’初探」, 『教學與研究』第8期.
- 董漫遠. 2009. 「推進‘軟實力’建設,加強人文外交」, 『國際問題研究』, 第6期.
- 李惠娟. 2014. 『外事工作實務』. 暨南: 暨南大學出版社.
- 薛云. 2007. 「經濟全球化背景下地方政府外事管理研究」, 博士學位論文, 吉林大學.
- 中國國際友好城市聯合會. 友城統計, <http://goo.gl/hvHBiF>
-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國內地方友協, <http://goo.gl/ICMGwL>